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

건설교통부는 1996년 6대 정책 과제 중의 한 가지로 부실 방지 및 건설업 경쟁력 강화를 표방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위상의 강화와 함께 OECD 회원 가입 및 건설 시장 개장에 대비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의 정착에 강한 정책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 행태의 바람직한 변화 및 관련 제도의 개선이다.

건설 공사의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제도는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정부는 「건설업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대금 지급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현실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건교부는 하도급 대금 지급에 관한 규제 차원의 법 제정 및 개정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 왔으며, 공정거래위원회도 「하도급법」 제정 이후 간헐적으로 일반건설업체의 표본을 선정해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불공정 사례 조사에 중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원활한 하도급 대금 지급에 관한 홍보 차원의 교육, 지속적인 지침 제시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의 노력은 미흡하였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보고서는 전체적인 ‘하도급 대금의 흐름도’의 틀 속에서 현장 실태 조사를 통하여 하도급 대금 지급이 원활하지 못한 배경과 이유를 원도급자·하도급자·발주자의 행태 측면에서 면밀히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 의식·행태 및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해 외국의 바람직한 하도급 대금 지급에 관한 기업 윤리적 관행 및 제도의 시사점과 함께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